

도의회, 올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일부 개정 청년기본조례 차별없는 고교 무상교육 등 이번 본회의에서만 총 26건의 안건 처리

전북도 예산안 8조7644억원 교육청 3조5398억원 등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전북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해 전통신장 및 상접가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가균형발전 지역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차별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장애인 탈시설 현실화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의견을 대변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21년 전북도 예산안 8조7644억원, 전북도교육청 3

조5398억원과 2020년도 추경예산 전북도 9조4159억원, 도교육청 3조7211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송지용 의장은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한 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의장단은 14일 의정실에서 동료의원의 전직을 거론하며 물의를 빚은 전북도교육청 정병의 부교육감에게 앞으로 신중한 발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도의회 의장단, 도교육청 재발 방지 주문

정병의 부교육감 "교육위 정책질의 답변 과정에서 발언 신중하지 못해" 사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의장단은 14일 의정실에서 동료의원의 전직을 거론하며 물의를 빚은 전북도 교육청 정병의 부교육감에게 앞으로 신중한 발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정 부교육감은 이날 송 의장과 의장단에 "교육위원회 정책질의 답변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의장단과 전북도의회 의원 모두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발언에 더욱 더 신중하

고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정 부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열정은 높이 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의회는 200만 도민들이 위임한 대의기관으로, 본인의 논리가 맞더라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교육감의 사과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 부교육

감은 물론 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뜻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영일 부의장과 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사석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신중을 기하고 정제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평화통일 실현

자치분권 연구회 정책세미나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평화통일 실현 및 자치분권 연구회'(연구대표 김대중, 정음2)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대표 김대중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인력 도입,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등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지방의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전영욱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미반영 사항을 설명하고 추가 입법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책연구 및 지방의회 공동연대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김대중(연구대표), 김기영(연구책임), 문승우 행정학과 교수, 김이재,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 황의탁 의원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유호상 기자

민주 안효영 의원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효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장수군 변압면 동화저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 받고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효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민지원 사업과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동화저수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도의회 "흉악범 재범예방 보호수용법 제정해야"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국주영은 도의원 "보호수용법 도입 재범 위험성 줄이고

출소 후 사회복귀 대비

부가적 형사재개 조속 도입을"



전북도의회가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3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2)이 대표 발의한 '이동 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악무도한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보호수용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

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동종 범죄의 재범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총 288만 6,499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14%에 해당하는 37만5,231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 건수는 지난 2016년 921건에서 2019년 1,217건으로 32%나 증가했고, 법무부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의 재범률이 지난 4년 평균 16.5%로 집계됐다.

따라서, 처벌 목적이 아닌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유발달적 보안처분의 하나인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부가적인 형사재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국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미 유럽에서는 보호수용과 유사한 자유발달적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안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간의 충돌 관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특히 아동에 대한 인권의 유린과 생명의 침해는 불가역적이고,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것이다"라며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의원 4명 '우수의정 대상' 수상

김만기·이한기·김대오·최찬욱 도의원

올해에는 의회 직원에게도 표창대 수여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완주) 김대오(익산1)·김만기(고창2)·이한기(진안)·최찬욱(전주10) 의원이 전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9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과 정책 제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또한, 제9회 우수의정대상에는 과거 의원에게만 수여했던 것과 달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실 문동환 주무관에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의 힘으



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활 여건 개선,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적극 소통하여 의정활동에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올 한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민생활동에 앞장서 헌신을 다하신 의원들과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5분 발언

"도내 공중화장실에 전용 세척시설 설치"

이병도 도의원 "장투·요루 장애인 대상

이동권·삶의 질 보장 위해"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3)이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돼 있는 장투·요루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및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도내 공중화장실에 전용 세척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병도 의원은 전북도의회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공중화장실 어디에도 장투·요루 장애인 전용 세척시설이 없어 이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장투란 주로 대장암이나 직장암, 가축성 용종증,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한 경우, 복부 표면에 장을 노출시켜 배변을 하도록 구멍을 낸 인공항문을 말한다.

95% 이상의 장투장애인이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걸린 성인으로서 장투장애인의 평균연령은 60세이다.

이들은 항문의 괄약근과 같은 조절능력이 없어 배변이 수시로 이뤄져 일반적으로 부차물(주머니)을 착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냄새와 가스배출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요루장애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해 요루(인공방광)를 시술한 경우를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장투·요루 장애인은 600명 정도이지만, 실제로 장투·요루 장애인인 경우 등록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이 거의 없고, 장애의 특성상 일부러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또 밝혀지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장애의 유형은 총 15개지만 실제로 화장실 사용과 직접적 연관이 많은 장애는 지적장애인과 장투·요루 장애인이다.

그러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설치 기준은 지적장애인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 장투·요루 장애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장투·요루 장애를 겪는 사람은 괄약근 같은 조절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주머니를 수시로 비워줘야만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할 수 있는 별도의 세척시설(용변기)이 있는 화장실은 전무하다.

이병도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대중교통이 필요하듯 장투·요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내 전용 세척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장투·요루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공중화장실만이 라도 전용 장애인화장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전북도청 및 도청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도내 공중장애인화장실에 장투·요루 장애인을 위한 전용 세척장치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전북도청 및 도청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도내 공중장애인화장실에 장투·요루 장애인을 위한 전용 세척장치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전북도청 및 도청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도내 공중장애인화장실에 장투·요루 장애인을 위한 전용 세척장치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내년 시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생들 차별 없어야"

김종식 도의원, 건의안 통해... "평균 금액 수준으로 지원돼야"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항으로 인해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평균 금액 수준의 지원액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식(더불어민주당, 군산2) 의원은 1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에서 '차별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도내 5개교 3,071명의 학생을 포함한 전국 102개교 60,971명의 학생에게도 평균 수준 지원액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방안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도내 다른 학교 및 학생들에 재정지원의 한계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생 중, 재정적 여유와 관심이 있는 교육청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생 간에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두 편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해당한다"며 "다른 일반 교와 달리 신입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기에 교육청 자체 예산 사용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러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재능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이런 학교가 일반교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시에 무상교육 지원 여부를 두고 학교 선택에 중점을 두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국 모든 고등학생이 차별 없이 동일한 지원액 지원을 촉구하는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 및 교육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